

근로형태 부가조사를 통해 본 비정규직 노동시장의 추이(Ⅱ)

성재민*

I. 머리말

통계청은 지난 10월 말에 2011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2000년대 초반 이후 8월에만 실시되던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는 2007년부터 3월과 8월에 조사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8월 조사를 중심으로 비정규직의 규모와 구성, 근로조건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전반적인 상황을 표로 제시하겠지만, 설명은 주로 국제금융위기 이후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지에 집중하겠다.

Ⅱ. 비정규직 규모 변화

비정규직 비중은 2004년 8월 전체 임금근로자의 37.0%로 정점에 도달한 후 2008년 8월 (33.8%)까지 감소하였으나 2009년 국제금융위기로 인해 34.9%까지 증가하였다. 2010년 경기가 호전되면서 2004년 이후 최저수준인 33.4%로 비중이 감소하였으나 2011년 8월 34.2%로 다시 소폭 증가했다. 세부 형태별로 보면 한시적 근로는 2004년 8월 24.7%로 정점에 도달한 후 꾸준히 감소했으나 2009년 8월과 2011년 8월에는 증가하였다. 비전형 근로는 2007년 8월, 2009년 8월, 2011년 8월에 13.9%로 한시적 근로와는 다르게 2000년대 후반과 2011년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시간제 근로도 최근으로 올수록 꾸준히 비중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표 1 참조).

* 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seongjm@kli.re.kr).

<표 1> 고용형태별 규모 추이

(단위: 천 명, %)

	임금근로자	정규직	비정규직			
			전 체	한시적 근로	비전형 근로	시간제근로
2002. 8	14,030	10,190 (72.6)	3,839 (27.4)	2,063 (14.7)	1,742 (12.4)	807 (5.8)
2003. 8	14,149	9,542 (67.4)	4,606 (32.6)	3,013 (21.3)	1,678 (11.9)	929 (6.6)
2004. 8	14,584	9,190 (63.0)	5,394 (37.0)	3,597 (24.7)	1,948 (13.4)	1,072 (7.4)
2005. 8	14,968	9,486 (63.4)	5,482 (36.6)	3,614 (24.2)	1,907 (12.7)	1,044 (7.0)
2006. 8	15,351	9,894 (64.5)	5,457 (35.6)	3,626 (23.6)	1,933 (12.6)	1,135 (7.4)
2007. 8	15,882	10,180 (64.1)	5,703 (35.9)	3,546 (22.3)	2,208 (13.9)	1,201 (7.6)
2008. 8	16,103	10,658 (66.2)	5,445 (33.8)	3,288 (20.4)	2,137 (13.3)	1,229 (7.6)
2009. 8	16,479	10,725 (65.1)	5,754 (34.9)	3,507 (21.3)	2,283 (13.9)	1,426 (8.7)
2010. 8	17,048	11,362 (66.7)	5,685 (33.4)	3,281 (19.2)	2,289 (13.4)	1,620 (9.5)
2011. 8	17,510	11,515 (65.8)	5,994 (34.2)	3,442 (19.7)	2,427 (13.9)	1,702 (9.7)

주: 1) () 안은 임금근로자 중 비중.

2) 한시적 근로이면서 비전형 근로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한시적 근로자에도 포함되고, 비전형 근로자에도 포함되므로, 전체 비정규직 수는 한시적 근로+비전형 근로+시간제 근로의 합이 아님. 전체 비정규직 수는 이와 같은 중복을 제거한 값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국제금융위기에서 빠져나와 호경기가 이어진 2009년 8월과 2010년 8월을 비교해보면 정규직이 637천 명 늘고 비정규직은 69천 명 줄어 정규직 중심으로 임금근로자 고용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011년 8월 임금근로자 고용성장은 정규직이 153천 명 늘고 비정규직이 309천 명 늘어 비정규직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비정규직 내의 세부 형태 별로 보면 한시적 근로가 161천 명 증가했고, 비전형 근로는 138천 명 증가했으며, 시간제 근로는 82천 명 증가해 각 세부 형태별로 그 수가 고루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한시적 근로자를 다시 세부 형태별로 나누어 보면 기간제 근로자의 비중이 가장 큰데, 임금근로자 중 비중으로 보면 2005년 8월에 18.2%로 가장 많았고, 근로자 수로 보면 2009년 8월에 2,815천 명으로 가장 많았다. 기간을 정하지는 않았으나 반복하여 계약이 갱신되고 있다는 ‘반복갱신’의 경우 2009년 8월 이후 1%대의 비중을 유지하고 있으며, 기간을 정하지는 않았으나 고용이 지속될 것이라 기대할 수 없는 ‘기대불가’는 2010년 8월 2.8%로 떨어진 후 다시 2011년 8월 2.5%로 비중이 더 감소했다. 2010년 8월보다 2011년 8월 기간제는 174천 명 증가했고, 반복갱신은 34천 명 증가한 반면, 기대불가는 45천 명 감소했다.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계약 기간별로 구분해 추이를 보면 1개월 미만 계약을 한 초단기 기간제 근로자 수와 비중의 감소가 2010년 8월까지 지속되다가 2011년 8월에는 멈춘 모습을 보이고 있다. 1개월 이상 1년 미만 계약을 한 기간제도 2010년 8월 34.3%, 2011년

<표 2> 한시적 근로 세부 형태별로 고용규모 및 비중 추이

(단위: 천 명, %)

	기간제	반복갱신	기대불가
2002. 8	1,536 (10.9)	281 (2.0)	247 (1.8)
2003. 8	2,403 (17.0)	248 (1.8)	362 (2.6)
2004. 8	2,491 (17.1)	580 (4.0)	526 (3.6)
2005. 8	2,728 (18.2)	302 (2.0)	585 (3.9)
2006. 8	2,722 (17.7)	465 (3.0)	439 (2.9)
2007. 8	2,531 (15.9)	555 (3.5)	460 (2.9)
2008. 8	2,365 (14.7)	374 (2.3)	549 (3.4)
2009. 8	2,815 (17.1)	170 (1.0)	521 (3.2)
2010. 8	2,494 (14.6)	305 (1.8)	481 (2.8)
2011. 8	2,668 (15.2)	339 (1.9)	436 (2.5)

주: () 안은 임금근로자 중 비중.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8월 34.7%로 비슷한 비중을 유지하고 있으며, 빠르게 증가해온 1년 기간제도 비중 증가가 2011년 8월에는 주춤한 상태이다. 1년 초과 2년 이하, 2년 초과 3년 이하 기간제도 2010년 8월과 비슷한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3년 초과 기간제만 다소 비중이 증가했다. 이를 정리하면, 2011년 8월 기간제 노동시장에서는 그간 진행되었던 1개월 미만 초단기 기간제 감소와 1년 기간제 증가가 멈춘 채 안정된 모습이 나타난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표 3>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계약 기간별 규모 추이

(단위: 천 명, %)

	1개월 미만	1개월 이상 1년 미만	1년	1년 초과 3년 이하		3년 초과
				1년 초과 2년 이하	2년 초과 3년 이하	
2002. 8	728 (47.4)	373 (24.3)	260 (17.0)	90 (5.9)		85 (5.5)
2003. 8	947 (39.4)	698 (29.0)	463 (19.3)	189 (7.9)		105 (4.4)
2004. 8	813 (32.6)	684 (27.4)	641 (25.7)	241 (9.7)		113 (4.5)
2005. 8	824 (30.2)	724 (26.6)	791 (29.0)	262 (9.6)		127 (4.6)
2006. 8	803 (29.5)	747 (27.4)	772 (28.4)	259 (9.5)		140 (5.2)
2007. 8	512 (20.2)	750 (29.6)	851 (33.6)	230 (9.1)		189 (7.5)
2008. 8	400 (16.9)	765 (32.3)	824 (34.8)	191 (8.1)	127 (5.4)	59 (2.5)
2009. 8	255 (9.0)	1,186 (42.1)	1,086 (38.6)	178 (6.3)	78 (2.8)	33 (1.2)
2010. 8	160 (6.4)	856 (34.3)	1,231 (49.3)	152 (6.1)	63 (2.5)	33 (1.3)
2011. 8	168 (6.3)	925 (34.7)	1,264 (47.4)	172 (6.5)	78 (2.9)	60 (2.2)

주: () 안은 기간제 근로자 중 각 고용계약 기간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비전형 근로를 세부 형태별로 나누어 보아도 큰 변화는 보이지 않는다. 파견은 임금근로자 중 비중이 1.1%로 2010년 8월보다 다소 줄었으며, 용역은 전년보다 근로자 수로는 64천 명, 비중은 0.2%p 증가했다. 특수형태근로자는 비중이 2010년과 유사하나 근로자 수는 소폭 늘었다. 가정 내 근로도 근로자 수는 5천 명 증가했지만, 비중은 전년과 동일한 수준이다. 일일근로는 전년 대비 92천 명 증가해 비전형 근로 중 가장 많이 증가했다. 이와 같은 비전형 근로의 변화는 파견, 용역, 일일근로의 경우 2000년대 중반 이전에 비해 2000년대 후반 및 최근에 비중과 근로자 수가 늘어나는 추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특수형태근로자와 가정 내 근로는 반대의 추세를 지속하고 있어 큰 변화 없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정리할 수 있다.

<표 4> 비전형 근로 세부 형태별 규모 추이

(단위: 천 명, %)

	파견	용역	특수형태근로	가정 내 근로	일일근로
2002. 8	94 (0.7)	332 (2.4)	772 (5.5)	235 (1.7)	412 (2.9)
2003. 8	98 (0.7)	346 (2.4)	600 (4.2)	166 (1.2)	589 (4.2)
2004. 8	117 (0.8)	413 (2.8)	711 (4.9)	171 (1.2)	666 (4.6)
2005. 8	118 (0.8)	431 (2.9)	633 (4.2)	141 (0.9)	718 (4.8)
2006. 8	131 (0.9)	498 (3.2)	617 (4.0)	175 (1.1)	667 (4.3)
2007. 8	174 (1.1)	593 (3.7)	635 (4.0)	125 (0.8)	845 (5.3)
2008. 8	139 (0.9)	641 (4.0)	595 (3.7)	65 (0.4)	818 (5.1)
2009. 8	165 (1.0)	622 (3.8)	637 (3.9)	99 (0.6)	883 (5.4)
2010. 8	211 (1.2)	608 (3.6)	590 (3.5)	70 (0.4)	870 (5.1)
2011. 8	197 (1.1)	672 (3.8)	614 (3.5)	75 (0.4)	962 (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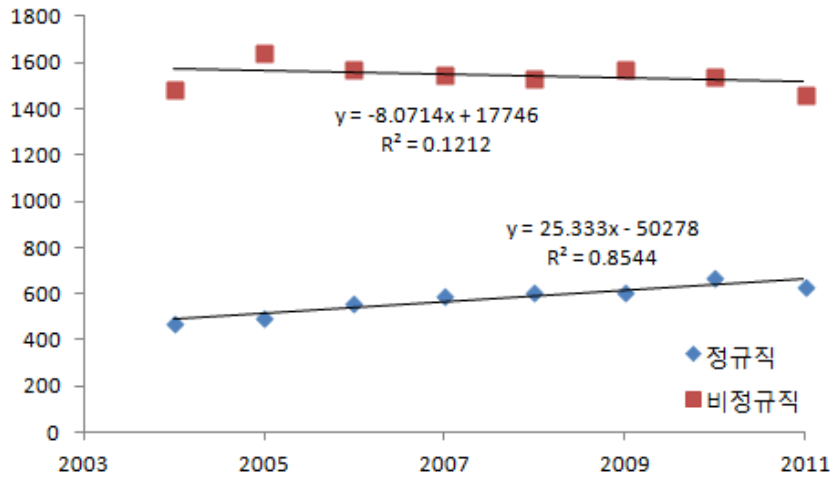
주: () 안은 괄호는 임금근로자 중 비중.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비정규직 총 근로자 수는 수학적으로 볼 때 신규 입직자 수가 늘거나, 평균 근속기간이 늘어날 때 증가할 수 있다. [그림 1]에서는 근속기간이 2개월 미만인 근로자 수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들이 신규 입직자를 대리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보면 2011년에는 2010년에 비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입직자 수가 줄었다.¹⁾ 이 그림은 추세선도 보여주고 있는데, 이를 보면 비정규직의 신규 입직자 수는 감소에 더 가까운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 정규직은 신규 입직자 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두 경우 모두 2011년은 하락한 추세를 보인다.

1) 근속기간이 2개월 미만인 근로자의 수가 새로 채용된 사람들의 정확한 수는 아니지만, 관련 지표를 구할 수 없는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새로 채용된 사람들을 비교적 가깝게 대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림 1] 정규직비정규직 신규 입직자 수(고용된 지 2개월 미만인 사람의 수) 추이

(단위: 천 명)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표 5> 고용형태별 근속기간이 2개월 미만인 근로자 수 추이

(단위: 천 명)

		2004. 8	2005. 8	2006. 8	2007. 8	2008. 8	2009. 8	2010. 8	2011. 8
임금근로자 전체		1,950	2,138	2,133	2,136	2,137	2,177	2,209	2,087
정규직		470	496	560	590	607	608	671	626
비정규직		1,479	1,643	1,573	1,546	1,531	1,569	1,538	1,461
한시적 근로	한시근로 전체	788	899	850	663	606	599	495	487
	기간제	696	794	774	549	470	486	367	383
	반복갱신	16	11	15	29	21	7	12	12
	기대불가	77	95	60	85	115	106	116	92
비전형 근로	비전형 전체	725	782	765	859	859	928	934	861
	파견	16	20	19	34	24	18	27	22
	용역	75	96	101	102	110	95	74	85
	특수고용	94	82	96	82	64	77	54	49
	가정 내 근로	62	55	56	48	29	45	29	29
	일일근로	580	622	593	701	723	789	799	733
시간제 근로		410	431	434	433	459	497	506	494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표 5>에서 2010년 8월과 2011년 8월을 비교해 보면 대부분의 세부 고용형태에서 신규 입직자 수가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의 총 근로자 수가 2010년 8월에 비해 증가한 것은 평균 근속기간의 증가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 비정규직의 평균 근속기간이 증가한다는 것은 노동시장에 큰 변화가 발생하지 않고 정중동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2008년 8월 24.2개월이었던 평균 근속기간이 국제금융 위기로 인한 구조조정 여파를 받아 2009년 8월에는 21.2개월로 급락했으나, 2) 경기회복에 따라 2010년 8월, 2011년 8월 연속으로 증가해 2002년 이후 가장 긴 평균 근속기간을 보이고 있다. 세부 형태별로 보면 용역과 가정 내 근로를 제외한 모든 형태에서 2010년 8월 대비 평균 근속기간이 증가했으며, 반복갱신, 기대불가, 파견, 특수고용, 시간제 근로에서는 2004년 이래 가장 긴 평균 근속기간을 보여주고 있고, 기간제 근로는 두 번째로 긴 평균 근속기간을 보여주고 있다.

<표 6> 정규·비정규직 유형별 평균 근속기간

(단위:개월)

		2004. 8	2005. 8	2006. 8	2007. 8	2008. 8	2009. 8	2010. 8	2011. 8
임금근로자 전체		52.9	54.3	54.1	55.1	57.1	58.6	59.4	61.2
정규직		69.8	71.8	70.1	71.3	73.9	78.6	77.3	79.2
비정규직		24.1	23.9	25.1	26.3	24.2	21.2	23.6	26.5
한시적 근로	한시근로 전체	25.9	25.8	28.4	31.5	28.9	23.2	26.9	30.7
	기간제	22.6	25.0	25.0	29.2	28.1	23.2	25.6	28.7
	반복갱신	50.5	56.4	61.4	57.2	52.5	46.7	59.7	62.1
	기대불가	14.6	13.6	13.9	13.5	16.1	15.6	12.8	18.0
비전형 근로	비전형 전체	21.9	21.6	20.0	20.3	20.8	20.7	23.3	24.3
	파견	26.7	28.5	24.0	25.1	29.0	25.5	30.0	35.1
	용역	22.8	24.7	23.6	25.7	23.9	25.3	30.3	29.1
	특수고용	37.1	38.5	32.9	35.2	39.8	39.7	45.1	49.2
	가정 내 근로	16.5	13.6	13.9	15.9	10.5	12.2	14.2	11.2
	일일근로	2.1	2.3	2.8	2.3	2.1	1.7	1.4	1.7
시간제 근로		11.5	10.7	12.3	11.4	11.8	12.0	13.4	15.9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2) 정규직은 같은 시기 평균 근속기간이 늘었는데, 국제금융위기 당시 비정규직에 구조조정이 집중된 대신 정규직은 자발적 이직이 감소하면서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났을 것으로 추측된다.

규모 변화와 관련된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면, 2011년 8월 비정규직 비중은 2010년 8월 대비 소폭 증가했다. 이것은 비정규직으로의 신규 입직이 늘어서가 아니라 국제금융 위기에서 빠져나와 노동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되어 평균 근속기간이 증가하면서 총 근로자 수가 증가한 데 기인한 것으로 추측된다. 세부적으로 보면 한시적 근로, 비전형 근로, 시간제 근로 모두에서 고루 증가했다. 기간제 근로에서 나타났던 1개월 미만 초단기 기간제 감소, 1년 기간제 중심의 기간제 노동시장의 변화는 멈추거나 주춤한 것으로 보인다. 비전형 근로는 세부 형태별로 볼 때 종래에 보이던 추세가 꾸준히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시간제 근로의 증가 역시 과거로부터 이어져온 추세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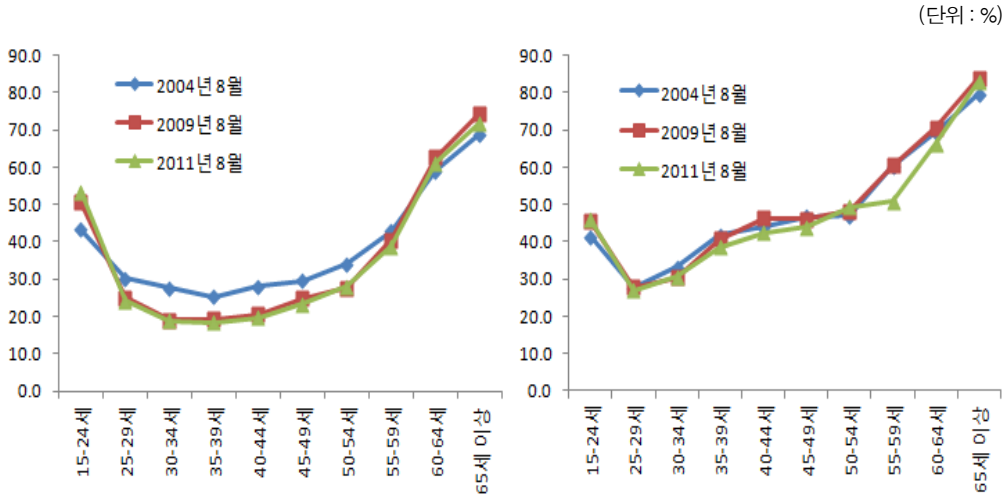
Ⅲ. 비정규직 특성 변화

이하에서는 특성별로 비정규직 규모 변화를 살펴보겠다. 먼저 [그림 2]에서 연령별로 보면 남성은 비정규직 비중이 진입연령대에서 높고 중핵연령대에서 낮은 후 은퇴연령대에서 다시 높아지는 U자형 커브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여성은 비정규직 비중이 25~29세에서 가장 낮고, 30~34세부터 상승 추세를 이어가는데, 15~24세만 빼고 본다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비정규직 비율이 선형에 가깝게 증가함을 알 수 있다. 2004년 8월과 비교해 볼 때 최근에는 30~34세 여성의 비정규직 비중 증가폭이 과거보다 작아졌다는 것도 특징이다. 이는 여성의 경제활동이 30~34세에서도 활발해지는 방향으로 바뀌는 것과 연관이 있을 것이다.

남성은 2004년 8월에 비정규직 비중이 32.2%였지만 2009년 8월에는 28.2%, 2011년 8월에는 27.8%로 하락했다. 연령별 그림을 보면 전체 연령대에서 고르게 하락한 것이 아니라 중핵연령대에서 비정규직 비중이 많이 감소하고 24세 이하, 60세 이상에서는 오히려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즉, 더 분명한 U자 형태로 변화한 것이다. 진입연령대에서는 정규직이 되기 더 힘들고, 퇴장연령대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로 인해 진입과 정착이 이루어지는 25~29세와 퇴장이 진행되는 55~59세도 비정규직 비중이 중핵연령대에 비해 약간 하락했다. 대신 중핵연령대인 30~34세에서 가장 많은 비정규직 하락이 나타났으며, 이렇게 하락한 비정규직 비중이 40~44세 정도까지는 지속되다가 그 이후 상승하는 것으로 보인다. 2009년 8월과 2011년 8월은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여성은 2004년 8월에 비정규직 비중이 43.7%, 2009년 8월 44.1%, 2011년 42.3%를 보여 남성과는 추세가 다르다. 그러나 소폭이긴 하지만 진입연령대와 퇴장연령대에서 비정규

[그림 2] 연령별·성별 비정규직 비중의 연도별 변화



주: 왼쪽이 남성, 오른쪽이 여성.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직 비중이 높아진 것은 남성과 유사하다.

남성의 경우 중핵연령대에서 정규직 비중이 2004년보다 증가했는데, 이는 꾸준히 나타난 변화였다. 이를 반영해 남성 정규직의 평균 연령은 2004년 38.2세, 2005년 38.7세, 2006년 38.8세, 2007년 39.3세, 2008년 39.6세, 2009년 39.8세, 2010년 40.1세, 2011년 40.3세로 아주 완만히 증가했다. 그러나 퇴장연령대에서 비정규직 비중이 증가해 온 영향으로 남성 비정규직의 평균 연령은 2004년 40.1세, 2005년 40.4세, 2006년 41.6세, 2007년 42.1세, 2008년 42.4세, 2009년 43.7세, 2010년 44.2세, 2011년 44.4세로 빠르게 증가해 왔으며, 특히 2009년 국제금융위기 시기에만 1.3세가 증가했다.

여성의 경우는 2004년에 비교해 2011년 정규직 평균 연령이 3.2세 증가해 남성보다 빠르게 평균 연령이 증가했다. 중핵연령대 정규직 비중 상승이 남성에 비해 여성에게 미미하게 나타난 탓으로 보인다. 비정규직은 같은 기간 4.1세 증가했으며, 2009년 1.3세 증가해 역시 남성과 유사한 추이를 보였다.³⁾

총 임금근로자 대비 비정규직 비중은 2004년 8월 37.0%, 2009년 8월은 34.9%, 2011년 8월은 34.2%로 나타나 2004년에 비해 2009년이 낮고, 2011년에는 더 낮아졌다. 그러나 학력별로 보면 고졸 이하의 저학력에서는 2004년 8월보다 2009년 8월 비정규직 비중이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테면 초졸 이하의 경우 2004년 8월 비정규직 비중이 61.9%

3) 여성 정규직 평균 연령은 2004년 34.9세, 2005년 35.2세, 2006년 35.9세, 2007년 36.5세, 2008년 37.0세, 2009년 37.2세, 2010년 37.9세, 2011년 38.1세로 나타났으며, 비정규직은 각각 39.3세, 40.0세, 40.6세, 41.1세, 41.5세, 42.8세, 43.0세, 43.4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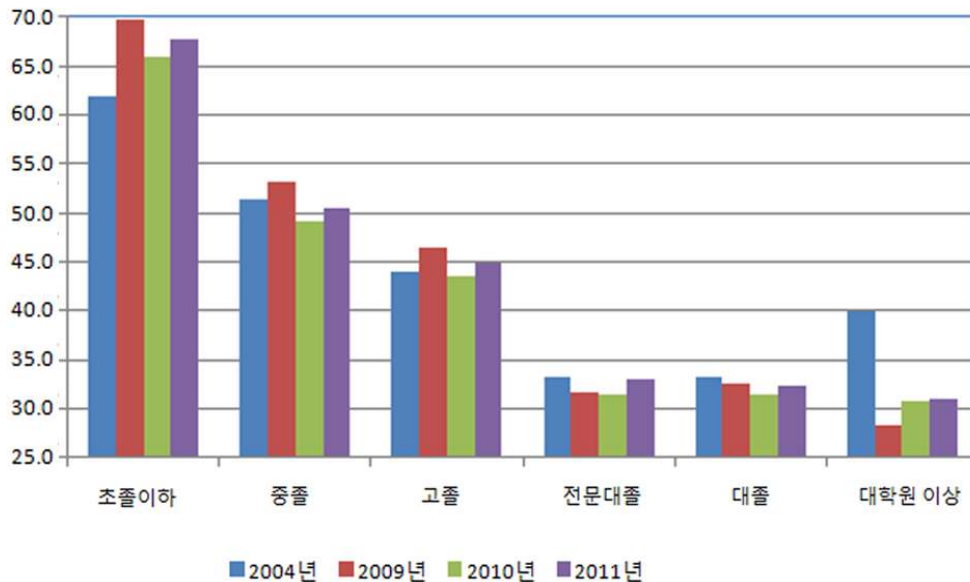
였는데 2009년 8월 69.8%로 상승했다가 2010년 8월 65.8%로 소폭 하락한 후 다시 2011년 8월 67.8%로 증가하였다. 중졸은 같은 시기 각각 51.3%, 53.1%, 49.1%, 50.4%로 변동했으며, 고졸도 43.9%, 46.4%, 43.6%, 44.9%로 변동했다(그림 3 참조).

전문대졸 이상 고학력에서는 저학력에서와는 달리 2004년 8월보다 2009년 8월의 비정규직 비중이 낮았는데, 특히 대학원 이상에서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대졸은 비정규직 비중이 각각 33.3%, 31.7%, 31.5%, 33.1%로 변동했으며, 대졸은 33.2%, 32.5%, 31.5%, 32.3%로 변동했다. 대학원졸은 39.8%, 28.3%, 30.8%, 31.0%로 변동했다.

저학력에서만 2009년 비정규직 비중이 2004년 비정규직 비중을 초과한 것은 저학력자가 고학력자보다 경제위기에 더 취약했기 때문이다.⁴⁾ 2009년 이후 대부분의 학력에서 비정규직 비중이 2010년 8월에는 낮고 2011년 8월에는 높은 모습을 보였다.

[그림 3] 학력별 비정규직 비중의 연도별 변화

(단위: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8월.

4) 저학력자, 고학력자 모두 2008년 8월에 비해 2009년 8월에 비정규직 비중이 증가했으나, 특히 저학력에서 더 많이 증가했다.

<표 7>에서 업종별로 보면 파견업이 많은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농림어업, 건설업 등에서 비정규직 고용 비중이 높다. 제조업은 광업 등과 함께 비정규직 고용 비중이 낮은 산업에 속한다.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교육서비스업도 평균 이상의 비정규직 비중을 보이는 산업이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꾸준히 비정규직 비중이 증가하는 업종이고, 교육서비스업도 2009년 이래 비정규직 비중이 늘고 있다. 그러나 건설업은 비정규직 비중이 줄고 있다.

2010년 8월과 2011년 8월을 비교하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 사업서비스업, 운수업, 예술스포츠 여가관련 산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순으로 비정규직 비중이 많이 늘었다. 하수폐기물 처리 및 광업, 공공행정은 감소폭이 큰 산업이다. 예술, 전기, 운수, 교육,

<표 7> 산업별로 본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 및 비정규직 수

(단위: %, 천 명)

	비정규직 비중				비정규직 수			
	2004. 8	2009. 8	2010. 8	2011. 8	2004. 8	2009. 8	2010. 8	2011. 8
농림어업	75.6	67.5	70.6	69.3	108	109	120	121
광업	16.5	17.3	14.3	9.6	2	3	3	1
제조업	23.3	16.2	14.9	15.6	816	523	520	538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23.1	9.9	9.9	13.1	16	9	8	9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환경복원	21.5	25.2	21.8	14.2	9	16	14	10
건설업	63.3	54.9	51.8	51.4	822	727	719	717
도매 및 소매업	36.1	32.9	30.9	30.9	656	634	623	647
운수업	28.1	21.4	16.7	20.7	175	144	116	149
숙박 및 음식점업	42.6	38.2	38.3	40.2	452	421	434	441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31.4	21.4	20.9	20.6	170	130	125	136
금융 및 보험업	44.1	43.8	40.7	41.6	302	313	317	343
부동산업 및 임대업	43.8	44.6	41.0	43.4	116	135	134	134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27.7	17.7	17.0	18.4	134	127	125	157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77.5	79.1	78.8	79.6	510	721	806	867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22.5	44.5	33.6	29.1	171	524	324	287
교육서비스업	37.2	34.9	38.0	41.1	450	513	537	555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26.7	33.6	35.8	37.6	146	317	402	465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45.0	42.7	42.2	51.7	78	99	97	129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	30.2	28.1	25.9	27.9	172	184	170	199
가구내 고용활동 및 기타	78.3	73.2	64.5	58.9	82	101	90	88
국제 및 외국기관	28.5	15.9	12.4	16.7	7	2	2	1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제조업은 평균 미만으로 비중이 증가했다. 근로자 수로 보면 사업서비스업과 보건업 및 사회복지업은 각각 61천 명, 63천 명이 증가해 비정규직이 가장 많이 증가한 산업이었다.

<표 8>에서 직종별로 보면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를 제외하고 비정규직 비중이 가장 높은 직종은 단순노무 종사자이며, 판매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의 순으로 비정규직 비중이 높았다.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도 서비스 종사자와 유사한 수준이다. 비정규직 비중이 가장 낮은 직종은 관리자, 사무 종사자와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이다.

2004년 8월에 비해 2009년 8월 다른 직종에서는 비정규직 비중이 줄었지만, 판매 종사자와 단순노무 종사자에서는 비정규직 비중이 오히려 증가했다. 2009년 이후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는 비정규직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서비스 종사자도 그렇다. 2010년 8월과 비교해 가장 많이 비정규직 수가 늘어난 직종은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137천 명 증가)이며,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에서 44천 명, 사무 종사자에서 41천 명, 서비스 종사자에서 41천 명, 단순노무 종사자에서 41천 명 순으로 증가했다.

<표 8> 직종별로 본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 및 비정규직 수

(단위: %, 천 명)

	비정규직 비중				비정규직 수			
	2004. 8	2009. 8	2010. 8	2011. 8	2004. 8	2009. 8	2010. 8	2011. 8
관리자	18.7	12.3	12.5	11.7	48	43	48	44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29.4	23.7	24.4	26.9	793	842	902	1,039
사무 종사자	23.0	18.7	18.1	18.2	713	631	643	684
서비스 종사자	40.4	37.6	38.3	40.3	547	567	593	634
판매 종사자	47.4	48.5	47.5	49.0	636	702	700	713
농림어업숙련 종사자	65.6	44.4	51.4	50.7	36	26	34	31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45.4	40.8	38.1	38.6	737	642	621	620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23.1	19.3	17.2	19.1	424	332	313	357
단순노무 종사자	62.9	68.0	63.5	63.7	1,458	1,968	1,830	1,871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앞서 보았듯이 2011년은 비정규직 중심으로 임금근로자가 증가하였다. 이와는 상반되게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상용직 중심의 증가, 임시 및 일용직의 감소가 2011년을 관통한 추세였다. <표 9>는 상반되게 보이는 두 현상이 어떻게 결합되어 나타날 수 있었는지를 보여준다. 정규직이면서 상용직인 정규 상용직은 전년동월대비 379천 명 증가한 반면, 정규직이면서 임시·일용직인 정규 비상용직은 같은 기간 226천 명 감소하였다. 비정규직이면서 상용직인 비정규 상용직은 180천 명 증가하였으며, 비정규직이면서 임시·일용직인 비정규 비상용직은 129천 명 증가하였다. 참고로 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한 유계 계약 근로자들이 보통 비정규 상용직으로 정의된다.

<표 9> 비정규직 여부별, 종사상 지위별, 연령별 증감

		증감(천 명)					월평균 임금 (만 원)	시간당 임금 (만 원)	평균 근로시간 (시간)
		2006 → 2007	2007 → 2008	2008 → 2009	2009 → 2010	2010 → 2011			
15 ~ 24세	정규 상용	-32	-44	-22	11	6	157.81	0.84	43.9
	정규 비상용	-28	-29	-24	-47	23	108.07	0.53	48.4
	비정규 상용	16	-35	17	9	-24	143.78	0.78	43.2
	비정규 비상용	-27	12	10	-12	53	66.84	0.57	29.0
25 ~ 29세	정규 상용	104	43	-38	3	47	195.92	1.07	43.1
	정규 비상용	-60	-41	-19	26	-74	136.54	0.66	48.9
	비정규 상용	55	-41	-33	30	-13	176.89	0.98	42.1
	비정규 비상용	-27	-1	16	-57	11	114.75	0.80	37.0
30 ~ 39세	정규 상용	12	254	135	129	65	261.11	1.42	43.2
	정규 비상용	-27	-40	-91	5	-86	157.26	0.75	49.3
	비정규 상용	73	-94	-44	6	95	216.72	1.21	42.3
	비정규 비상용	-75	-24	-39	-78	-42	139.17	0.95	36.3
40 ~ 49세	정규 상용	103	209	123	162	145	318.01	1.74	43.4
	정규 비상용	37	-30	-59	80	-103	143.58	0.68	49.6
	비정규 상용	44	-51	14	72	75	207.87	1.17	41.7
	비정규 비상용	28	-12	61	-128	-10	129.79	0.81	38.7
50 ~ 59세	정규 상용	85	116	120	95	113	315.39	1.71	44.5
	정규 비상용	26	35	-41	115	2	136.73	0.64	50.5
	비정규 상용	37	-6	40	82	12	176.86	0.96	44.0
	비정규 비상용	73	-8	55	-1	79	114.45	0.70	39.2
60세 이상	정규 상용	21	-10	12	43	2	313.54	1.67	46.3
	정규 비상용	46	15	-30	15	12	96.55	0.46	49.9
	비정규 상용	5	4	41	37	36	145.96	0.83	51.1
	비정규 비상용	45	0	171	-28	38	64.39	0.50	31.3
전 체	정규 상용	291	567	331	443	379			
	정규 비상용	-6	-89	-264	194	-226			
	비정규 상용	229	-224	34	235	180			
	비정규 비상용	17	-34	275	-304	129			
	전 체	531	221	375	569	462			

주: 증감은 각 연도 8월 기준. 월평균 임금, 시간당 임금, 평균 근로시간은 2011년 8월 기준.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즉, 상용직이면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모두 증가하였으며, 임시·일용직 중 비정규직은 증가했지만 정규직은 감소한 것이다. 임시직은 통계청의 정의상 1년 미만 일하도록 계약되어야 하기 때문에 정규직일 수 없지만, 1년 이상 일할 수 있어도 퇴직금이나 상여금 등 회사의 인사관리규칙 등에서 제외되는 형태의 고용계약에 있을 경우 임시직으로 구분하게 되어 있어 정규직이면서 임시·일용직인 사람들이 존재한다. 이들은 대체로 사회보험 적용률도 대단히 낮고, 대부분의 노동법 규제에서 벗어나 있어 비공식 고용의 특성을 강하게 띤다. 평균 임금을 보면 월평균 임금은 모든 연령대에서 정규 상용>비정규 상용>정규 비상용>비정규 비상용 순으로 낮지만, 시간당 임금은 모든 연령대에서 정규 상용>비정규 상용>비정규 비상용>정규 비상용 순으로 낮다. 이는 정규 비상용직이 시간당 임금은 비정규 비상용직보다 낮지만, 근로시간이 길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실제 정규 비상용직의 근로시간은 정규직보다도 길게 나타난다.

<표 9>에 제시된 ‘전체’를 보면 2006년 이후 기간 중 2009년에서 2010년을 제외한 전 기간에서 정규 비상용직은 감소해 왔다. 연령대별로 보면 50대 이상을 제외하고 대체로 이 추이를 보여준다. 비정규 상용직도 2007년에서 2008년을 제외한 나머지 전 기간에서 증가해 왔다. 다만, 연령대별로 보면 30대 이하 젊은 연령층에서는 이러한 추세가 나타나지 않는다. 가장 뚜렷이 나타나는 추이는 정규 상용직의 증가이다. 전 기간에서 정규 상용직은 증가해 왔고, 연령대별로 보아도 15~24세만 뚜렷하지 않을 뿐 25~29세의 2008~2009년 시기만 제외하면⁵⁾ 모든 연령대에서 정규 상용직의 증가는 뚜렷하게 나타난다. 정리하면, 각 연령대에서 시간당 임금이 가장 열악한 정규 비상용직은 꾸준히 감소하고, 시간당 임금이 가장 양호한 정규 상용직은 꾸준히 늘어난 셈이다.

정규 상용직 대비 상대임금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각 형태에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를테면 비정규 상용직의 상대 시간당 임금은 25~29세에서 92.4%(=0.98/1.07)이지만, 30대에서는 85.1%, 40대에서는 67.3%, 50대에서는 56.2%, 60대 이상에서는 49.9%로 감소한다.

<표 10>에서 사업체 규모별로 살펴볼 때 1~4인 규모에서는 비정규 비상용직이 가장 많고, 5~9인은 과거에는 비정규 비상용직이 가장 많았으나 2009년 이후 정규 상용직이 가장 많이 변했다. 나머지 규모에서는 정규 상용직이 가장 많았다. 2011년 8월 기준으로 볼 때 사업체 규모가 커질수록 정규 상용직 비중이 증가하는데, 1~4인 미만 사업체의 정규 상용직 비중은 18.2%에 불과한 반면, 5~9인 35.7%, 10~29인 48.3%, 30~99인 61.7%, 100~299인 74.9%, 300인 이상은 81.0%가 정규 상용직으로 고용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 상용직 비중은 대부분의 사업체 규모에서 대체로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300인 이상의 경우 2009년 8월 이후 감소해서 다른 규모와는 다른 추세를 보이고

5) 국제금융위기로 인해 정규 상용직 신규 채용이 줄어든 탓으로 풀이된다.

<표 10> 비정규직 여부별, 종사상 지위별, 사업체 규모별 인원 수 추이

		2004. 8	2005. 8	2006. 8	2007. 8	2008. 8	2009. 8	2010. 8	2011. 8	시간당 임금 (만 원)
1~4인	정규 상용	200	272	380	380	423	476	484	611	0.98
	정규 비상용	1,237	1,202	1,268	1,295	1,322	1,221	1,254	1,198	0.58
	비정규 상용	47	71	98	127	117	127	159	197	0.76
	비정규 비상용	1,325	1,429	1,339	1,369	1,276	1,235	1,298	1,349	0.59
5~9인	정규 상용	608	686	739	791	863	885	958	1,064	1.18
	정규 비상용	796	791	843	876	836	751	856	757	0.67
	비정규 상용	189	145	167	184	202	224	257	279	0.91
	비정규 비상용	854	861	825	848	890	880	835	877	0.66
10~29인	정규 상용	1,305	1,367	1,388	1,545	1,694	1,690	1,850	1,918	1.36
	정규 비상용	636	626	645	639	591	527	621	572	0.71
	비정규 상용	377	339	389	457	416	472	510	572	0.92
	비정규 비상용	833	854	846	890	892	1,025	877	912	0.78
30~99인	정규 상용	1,627	1,672	1,717	1,781	1,912	1,979	2,120	2,143	1.49
	정규 비상용	286	289	316	305	285	271	265	233	0.74
	비정규 상용	458	450	443	518	424	435	545	545	1.04
	비정규 비상용	504	531	550	508	513	624	555	552	0.94
100~299인	정규 상용	955	940	1,003	1,004	1,111	1,188	1,258	1,326	1.54
	정규 비상용	96	116	125	87	90	79	66	69	0.69
	비정규 상용	283	253	250	281	239	207	222	244	1.31
	비정규 비상용	155	175	182	162	154	182	129	131	0.79
300인 이상	정규 상용	1,393	1,476	1,413	1,429	1,495	1,612	1,602	1,590	1.99
	정규 비상용	51	48	59	47	37	47	29	36	0.75
	비정규 상용	258	254	257	265	210	178	185	222	1.61
	비정규 비상용	112	121	112	92	111	165	113	115	1.06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있다. 다른 규모에서는 2010~2011년간에도 정규 상용직이 모두 증가했지만, 300인 이상에서만 12천 명 감소했다.

정규 비상용직은 대부분의 규모에서 증가하지 않고 있으며, 감소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비정규 상용직은 소규모 사업체일수록 꾸준히 증가하는 추이가 뚜렷하며, 대규모 사업체에서는 2007~2009년 8월에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비정규 비상용직은 규모별로 뚜렷한 추이가 보이지 않는데, 대체로 대부분의 규모에서 2009년 8월에 근로자 수가 많았고, 2010년 8월에 비해서는 2011년 8월에 수가 늘었다.

IV. 비정규직 임금 변화

정규직의 임금은 꾸준히 증가한 반면, 비정규직의 임금은 2009년 국제금융위기의 영향으로 하락하였다. 이로 인해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상대임금은 2009년 54.6으로 급락하였다. 2010년, 2011년을 경과하면서 비정규직의 상대임금은 증가하였으나 아직 2008년 이전 수준에 도달하지는 못한 형편이다. 비정규직 세부 형태별로 보아도 대체로 2009년에 비해 2011년 상대임금은 상승했다(표 11 참조).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상대임금 하락은 실질임금 변화로 환산해볼 경우 비정규직의 실질임금 하락 또는 정규직의 실질임금 급상승을 의미할 수 있다. 실질임금⁶⁾을 계산해보면 정규직은 2004년 181.5만 원, 2005년 184.6만 원, 2006년 186.2만 원, 2007년 191.5만

<표 11> 근로형태별 월평균 상대임금 추이(8월 기준, 정규직=100)

(단위: %)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정규직	상대임금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월평균임금 (만 원)	145.6	167.8	177.1	184.6	190.8	200.8	212.7	220.1	229.4	238.8
비정규직	상대임금	67.1	61.3	65.0	62.7	62.8	63.5	60.9	54.6	54.8	56.4
	월평균임금 (만 원)	97.7	102.8	115.2	115.6	119.8	127.6	129.6	120.2	125.8	134.8
한시적 근로		71.3	65.1	69.5	67.2	68.8	71.7	68.5	59.1	61.0	62.9
기간제		72.5	64.5	67.0	68.2	67.7	70.6	70.0	59.6	59.3	61.3
반복갱신		79.9	88.1	96.2	91.7	93.0	97.0	87.1	87.7	98.6	92.2
기대불가		54.3	53.4	51.9	50.1	49.8	47.0	49.5	47.2	46.2	50.1
비전형 근로		67.0	58.2	60.3	58.5	54.8	55.4	56.3	54.1	54.4	55.3
파견		78.9	65.8	71.8	71.3	66.1	66.8	69.3	64.3	61.5	63.8
용역		59.2	51.9	52.1	51.4	48.9	51.0	50.9	50.5	51.2	51.3
특수형태근로		82.3	75.8	78.5	77.1	69.3	70.8	73.0	69.5	71.0	75.0
가정 내 근로		36.4	24.6	31.8	30.7	31.3	28.3	22.9	27.3	19.0	21.8
일일근로		54.2	48.0	47.2	46.6	45.7	44.4	46.2	43.3	45.3	44.2
시간제 근로		34.3	29.8	30.4	28.3	28.9	27.9	27.0	24.3	24.6	25.3

주: 각 연도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정규직 임금을 100이라고 할 때 각 고용형태별 상대임금.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6) 최근 3개월 평균 임금이므로 6~8월 소비자물가지수를 평균 내서 계산하였다.

원, 2008년 191.8만 원, 2009년 194.8만 원, 2010년 198.0만 원, 2011년 196.6만 원으로 비교적 꾸준히 상승한 반면, 비정규직은 118.0만 원, 115.6만 원, 116.9만 원, 121.6만 원, 116.9만 원, 106.4만 원, 108.6만 원, 111.0만 원으로 나타나 꾸준히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기복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09년 국제금융위기의 영향으로 급락한 비정규직의 실질임금은 2011년 8월에도 2008년 이전 수준으로 상승하지 못하고 있어⁷⁾ 상대임금 하락에는 비정규직의 실질임금 하락이 중요하게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상대임금 격차가 국제금융위기 이전보다 크게 하락해 여전히 이전 수준으로 증가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살펴보기 위해 Juhn, Murphy & Pierce⁸⁾가 개발한 분석방법을 활용해 임금격차 분해를 해보았다. 이 분해 방법에 따르면 시간에 따른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 변화는 관찰된 요소의 변화와 관찰되지 않은 요인에 근거한 변화로 구분될 수 있다. 관찰된 요소의 변화는 다시 분포 자체의 변화와 이 요소의 가격 변화로 분해될 수 있으며, 미관찰된 요인의 변화도 미관찰 요인의 분포 변화와 미관찰된 요인의 가격 변화로 분해될 수 있다. 관찰된 요소의 분포 변화는 이를테면 근속기간의 증가 같은 것이다. 정규직의 평균 근속기간은 증가하는데 비정규직의 평균 근속기간은 증가하지 못한다면 근속이 증가함에 따라 임금이 증가하는 임금체계가 존재할 때 정규직의 평균 임금은 증가하고 비정규직의 평균 임금은 정체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근속기간이라는 관찰된 요소의 분포 변화가 시간에 따라 정규직·비정규직의 임금격차를 증가시키는 사례가 될 수 있다. 관찰된 요소의 가격 변화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평균 근속기간에 차이가 없어도 정규직이 비정규직보다 근속이 증가함에 따라 더 많은 임금증가 혜택을 받는 방식의 변화가 있었다면 근속 분포가 변화하지 않아도 정규직이 비정규직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게 되어 임금격차가 증가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관찰된 요소인 근속의 가격 변화가 임금격차에 대해 갖는 효과이다.

미관찰된 요소의 분포 변화란 회귀식을 추정하고 남은 잔차가 있을 것인데 이 잔차는 회귀식에 들어간 설명변수들(관찰된 요소들)로 설명되고 남은 임금변동 부분이 된다. 이 설명되고 남은 임금에서의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를 잔여 임금격차라 하는데, 이 잔여 임금격차도 분포 변화와 가격 변화를 구분할 수 있다. 비정규직의 평균 잔여임금은 정규직의 중위임금 수준일 수도 있고, 정규직의 임금을 10분위로 나눌 때 하위 3분위에

7) 부가조사에 있는 평소 근로시간 문항을 이용해 실질 시간당 임금을 계산해 보면 정규직은 2004년 0.888만 원, 2005년 0.917만 원, 2006년 0.935만 원, 2007년 0.974만 원, 2008년 0.994만 원, 2009년 1.028만 원, 2010년 1.049만 원, 2011년 1.051만 원으로 증가했으며, 비정규직은 0.653만 원, 0.646만 원, 0.664만 원, 0.690만 원, 0.676만 원, 0.632만 원, 0.656만 원, 0.687만 원으로 나타나 2011년 8월 현재 2007년 8월 수준에 도달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

8) Blau, F. and L. Kahn(1996), "Wage Structure and Gender Earnings Differentials: An International Comparison", *Economica* 63(250)에서 재인용.

해당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정규직 잔여임금 분위 대비 비정규직의 평균 잔여임금의 위치 변화를 미관찰된 요소의 분포 변화라 한다. 또한 비정규직의 평균 잔여임금은 과거나 지금이나 하위 3분위에 해당하는데 정규직 안에서 임금불평등이 강화됨에 따라 정규직 중위임금 대비 하위 3분위 임금격차가 커지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잔여임금 격차가 강화될 수도 있다. 이를 문헌에서 미관찰 요소의 가격 변화라고 한다. 예를 들어 소위 ‘스펙’은 데이터상에서 세밀하게 구분할 수 없어 미관찰 요소가 되는데, 스펙 좋은 사람은 과거보다 지금 더 정규직 일자리를 쉽게 가질 수 있게 변했고, 스펙 나쁜 사람들은 과거보다 지금 더 정규직 일자리를 가지기 어렵게 되었다면, 정규직은 스펙 좋은 사람들이 다수를 접하게 되고 비정규직은 과거보다 스펙 나쁜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다면 이전에는 정규직의 하위 4분위쯤 되던 비정규직 평균 잔여임금 수준이 하위 3분위로 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미관찰 요소인 스펙의 분포 변화에 따른 임금격차 증가이다. 또는 과거보다 기업에서 스펙 좋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임금을 주게 된 상황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의 스펙 분포가 변하지 않더라도 비정규직보다 정규직에 스펙 좋은 사람이 많다면 정규직의 잔여 평균임금은 증가하고 비정규직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정규직에서 스펙 좋은 사람들만 높은 임금을 받으면 정규직 내에서도

<표 12> 연도간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 변화 분해

	2007년(A)과 2011년(B) 임금격차 변화 분해			2007년(A)과 2009년(B) 임금격차 변화 분해			2009년(A)과 2011년(B) 임금격차 변화 분해		
	총격차	분포 효과	가격 효과	총격차	분포 효과	가격 효과	총격차	분포 효과	가격 효과
A년도	36.44%			36.44%			47.75%		
B년도	44.24%			47.75%			44.24%		
격차 변화(B-A)	7.80			11.31			-3.52		
관찰된 격차 변화	6.60	8.95	-2.34	8.93	11.40	-2.46	-2.33	-2.17	-0.16
연령		2.25	-0.27		1.81	-1.28		0.39	1.05
근속 기간		2.10	-1.71		3.36	-0.96		-1.18	-0.83
여성 비중		1.40	-0.25		1.61	-0.37		-0.20	0.11
학력		1.24	-0.29		1.97	0.27		-0.72	-0.56
산업		0.66	0.35		0.08	0.41		0.81	-0.29
직종		1.30	-0.18		2.57	-0.53		-1.27	0.35
잔여 격차 변화	1.19	1.17	0.03	2.38	2.51	-0.12	-1.19	-1.29	0.10

주: 각 연도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계산함. 실질시간당 임금에 로그를 취해 종속변수로 이용했으며, 연령은 연령 및 연령제곱, 근속은 근속 개월 그대로, 여성 비중은 여성 더미, 학력은 초졸을 기준으로 중졸, 고졸,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 이상 더미, 산업은 산업대분류(제조업 기준), 직종은 직종대분류(단순노무자 기준)로 하여 회귀식을 추정하였음. 회귀식 추정결과 보고는 원고 분량상 생략하였음.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임금불평등이 증가할 것인데, 이로 인해 비정규직과 잔여임금 격차가 증가하는 것이 바로 미관찰 요소인 스펙의 가격 변화에 따른 임금격차 증가가 된다.

비교대상 시기는 2007년 8월, 2009년 8월, 2011년 8월로 하였다. 2008년은 내수침체가 있었던 시기로 이로 인한 고용변동이 컸다. 경기침체가 오면 우선적으로 변동이 일어나는 것이 비정규직이므로, 이미 상대임금이 떨어지는 등의 변화가 이 시기에 나타났다. 이를 감안하여 내수침체가 시작되기 전인 2007년 8월을 비교의 시작시점으로 삼았다.

<표 12>에 결과가 나타나 있는데, 2007년과 2009년간 상대임금 격차는 11.31%p (=47.75-36.44)만큼 증가했다. 2007년과 2009년 사이의 정규직-비정규직 간 상대임금 격차 변화의 대부분((8.93%p=11.31%p)×100=78.0%)이 관찰된 특성의 변화로 설명된다. 이를 다시 분해해 보면 관찰된 특성의 가격 변화는 임금격차를 오히려 감소시켜야 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2.46%p), 이는 관찰된 특성의 분포 변화가 절대적으로 중요했다는 의미가 된다(11.40%p). 특히 정규직과 비정규직에서 두 시기에 걸쳐 나타난 평균 근속기간의 분포 변화 효과가 매우 중요했으며(3.36%p), 관리자, 전문가, 사무직 같이 평균 임금이 높은 직종에서는 비정규직 비중이 줄고, 판매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 같이 평균 임금이 낮은 직종에서는 비정규직이 증가하는 직종 분포 변화의 설명력도 다음으로 중요하게 나타났다(2.57%p). 이 시기에 저학력일수록 비정규직 비중이 크게 증가한 것도 중요하게 작용했으며(1.97%p), 고연령층에서 비정규직 비중이 증가한 것도 중요하게 나타났다(1.81%p). 산업에서 정규직-비정규직 간 비중 변화는 영향이 미미했다(0.66%p).

잔여임금 격차 변화에 대한 설명력은 크지 않지만, 이 역시 분해해 보면 정규직 잔여임금 분포에는 변화가 없으나 비정규직의 평균 잔여임금만 떨어졌다고 볼 수 있는 미관찰된 분포 효과가 압도적인 것을 알 수 있다(2.51%p).

회복기인 2009년과 2011년을 비교해 보면 잔여임금 격차보다 관찰된 속성에서의 변화가 중요하며, 양쪽 모두에서 분포 변화 효과가 가격 변화 효과를 압도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평균 임금이 비교적 높은 전문가에서 비정규직 비중이 증가하고 평균 임금이 낮은 단순노무직에서는 비정규직이 감소하는 등의 변화가 나타난 직종에서의 변화(-1.27), 비정규직의 평균 근속이 증가하면서 2009년에 비해 근속기간 격차가 감소한 것(-1.18)이 중요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과 연령은 여전히 상대임금 격차를 다소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변화했다.

노동시장이 안정되면서 상대임금 격차는 줄고 있지만, 여전히 2007년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이유를 살펴보기 위해 2007~2011년을 비교해보면, 잔여임금 격차보다 관찰된 속성에서의 변화가 중요하며, 양쪽 모두에서 분포 변화 효과가 중요했다. 연령 분포 변화, 근속기간 격차, 비정규직에서 여성 비중 증가, 직종 변화, 학력 순으로 설명력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앞의 분석에서 본 것처럼 연령별 비정규직 비중은 여전히 2009년과 유사하며

비정규직의 근속기간이 증가하긴 했지만, 정규직은 더 많이 증가해 2009년만큼은 아니지만 여전히 격차가 존재하는 등 2009년 변화의 영향권에서 아직 빠져나오지 못했다.

다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2년을 초과해 장기간 노동력이 필요한 업무가 있다면 비정규직을 반복적으로 쓰지 말고 정규직을 뽑아서 쓰라는 취지로 제정되었기 때문에 노동시장이 안정되더라도 비정규직의 평균 근속기간은 정규직처럼 꾸준히 증가하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2007년과 비교해 2011년 나타난 평균 근속분포 차이에 따른 비정규직-정규직 간 임금격차는 어느 정도는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이는 다른 것이 동일하다면 앞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상대임금 격차는 감소하긴 하겠지만, 2007년 수준으로 감소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물론 이는 어디까지나 ‘다른 것이 동일하다면’ 그렇다는 것이지 비정규직 임금차별 감소 같은 변화가 생긴다면 더 감소할 수도 있을 것이다.

V. 맺음말

지금까지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자료를 이용해 비정규직 노동시장에서 나타난 변화를 분석했다. 국제금융위기를 기점으로 비정규직 노동시장이 큰 변화를 겪었으나 지금은 안정된 상태로 과거와 비슷한 양상으로 회귀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2007년 수준에 도달하지는 못하고 있다. 이는 실질임금 변동과 이를 반영한 상대임금 격차 변화에서 뚜렷이 나타나는데, 상대임금 격차 변화는 주로 2009년을 전후해 나타난 경기침체로 인한 비정규직 노동시장에서의 일시적 분포 변화가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계속 노동시장이 안정되면서 영향권에서 벗어난다면 상대임금 격차는 당분간 감소할 것이다. 하지만 내년에는 국제적인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우리나라도 그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여러 기관에서 전망하고 있다. 국제금융위기에서 보았듯이 경제에 어려움이 닥치면 비정규직 노동시장에서 구조조정이 우선적으로 발생한다. 따라서 비정규직 노동시장의 상황 악화가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꾸준한 동향 파악이 필요하다. **KLI**